

전환기를 맞는 채란 양계 업계의 의식개혁



한 희
풍한농장 대표

채 란양계업은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까지 한때 정부의 축산진흥 정책에 힘입어 가장 먼저 전업 축산으로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그후 정책당국에서 양 계산업도 타농업분야와 마찬가지로 과잉생산물에 대한 대책없이 복합 영농의 범주에서 농가부업으로 장려하고 생산시설, 사양관리, 경영면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전업 양계쪽은 규제일변도의 정책으로 결국 생산 기술은 낙후된 상태에서 물량만 과잉 생산되어 최근 부업농가는 물론 전업양계가도 생산비에 못미치는 불황 속에 고전하게 되었다.

또 최근 정치, 경제, 사회적 변혁기와 우리나라 공산 품의 대미수출 흑자에 상응한 미국농산물의 수입개방 압력 등 격동기를 맞이한 우리 산업사회에서 지금까지 단순 노동집약적 형태를 탈피못한 채란 양계업은 사료 값 양등, 난가하락, 인력난, 개방압력 등 한꺼번에 밀 어닥친 파고속에 이제 그 소멸의 위기감조차 느끼게 되었다.

최근 이런 어려운 격동기를 맞이하여 일부에서 몇몇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쿼터제, 협동조합체제, 인터 그레이션 등을 각자 그 장점만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 이에 대한 한 전업 양계인으로서의 견해를 피력코자 한다.

규제 일변도의 제도는 요령좋은 사람만 득이 돼

모든 제도가 선진국에서 성공하였다하여 사회성숙도가 낮은 개발도상국에서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예를들면 의회 민주주의가 미국이나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가장 성공한 정치제도이나 한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에선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하고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규제일변도의 제도는 한마디로 요령좋은 사람만 득이 되어왔고 우리 사회제도 수준에선 성공한 예가 생각나지 않으며 오히려 부작용만 더 컸음을 우리 모든 국민이 경험해 온 바이다.

우리나라 다른 산업부문에선 구조적으로 농업분야보다 경쟁력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소득상승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단순노동력의 구득난, 인건비 상승에 대응하는 산업의 체질강화를 위해 자율화의 목소리가 높은데 선진국에 비해 기계화가 가장 뒤쳐 이농현상이 극심한 우리농업 분야에서만 구태의연한 각종 규제를 털 폐못하고 발전에 저해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쿼터제의 경우 이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를 보자.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연방, 페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이스라엘 등으로 국민소득이 모두 \$ 10,000 이상이고 사회보장제도와 민주사회 제도가 완벽하고 공직사회와 사회성숙도가 이루어진 나라들이다. 이들 나라에서 성공한 제도가 우리 사회수준 특히 참여의식은 고사하고 구심점 하나 형성 못하고 있는 채란양계업계에서 모든 사람의 자발적인 절실한 요구와 이해가 결여된 상태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아직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다.

유통체계 정립이 우선되어야

일례로 캐나다 쿼터제와 우리의 현실을 비교해 보자. 국민소득수준이 높은 캐나다의 소비자들은 좋은 품질의 계란을 원하므로 GP 센타를 거치지 않은 계란은 시중에 유통될 수 없어 그들은 각지역 GP 센타를 통한 유통과정에서 계란생산량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농장에서 구멍가게를 비롯한 모든 유통단계에 직접 판매가 가능한 현재와 같이 엉망인 유통

과정에서 어디에서 계란생산량을 규제할 것인가?

만약 계사 수용능력이나 마리수로 규제한다면 동일한 마리수를 갖고도 생산자의 수준과 계군 능력에 따라 생산량이 천차만별인데 과연 전국 산간벽지까지 널린 양 계장을 공직자라면 봉사보다는 군림할 자세부터 생각하는 우리 사회수준에서 쿼터를 담당할 공직자가 눈앞에 보이는 이익때문에 숫자만을 늘리려는 생산자의 유혹앞에 얼마나 사심없이 공정하게 규제할 수 있을까.

기존 협동조합 조직 제도적 모순점 많아

카나다는 대미무역에서 지금까지 우리보다 더 큰 무역흑자를 누리고도 축산물에 대한 개방압력을 느끼지 않을만큼 정치적으로도 독립된 국가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모든 국민여론과 수많은 소사육농가의 조직적이고 끈질긴 투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수출규모에서 풍돈도 되지 않을 쇠고기 수입을 결정한 마당에 생산물의 질적 향상 없이 계란가격만 높게 형성될 때 국내 소비자의 반발과 미국의 수입개방 압력을 국민여론은 물론 경제부처에서 가장 힘없는 농림수산부가 속적으로 열세이고 조직력과 구심점이 없는 우리 양계인을 위해 얼마나 정치력을 보여 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협동조합체제는 영세한 우리 업계의 현실에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되나 현재와 같이 조합자체의 이익에만 급급하고 관료적인 농협이나 축협 또는 현재 지역조합에 불과한 양계조합이라면 양계인에게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모름지기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절실한 요구에 부응하여 자생적으로 생긴 인적결합의 조직체여야 하며 이를 위해 현 협동조합의 제도적인 모순점을 민주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조합 구성원이 될 양계인의 의식 개혁과 자발적인 참여가 우선되어야 한다.

대자본의 예속화 추구하는 계열화 재고되어야

계열화도 우리 양계업자에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사료회사 같은 곳에서 고객관리를 위한 기술보급과 생산물의 판매대행 같은 사양기를 위한 발전적이고 봉사적인 자세나 의도의 계열화라면 몰라도 대자본 밑에 양계업자의 예속화를 추구하는 방식이라면 오히려 경계해야 할 것이다.

모든 제도에 앞서 현 노동집약적인 생산설비를 현대화하여 인력 구득난에서 벗어나고 생산물의 품질향상을 추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타식품의 양계산물 시장 잡

식을 막고 앞으로 닥칠 국제화추세에 대처할 수 있는 발전적 길을 모색할 결정적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생산설비를 현대화하기 위해 기존의 토지형태와 계사로는 도저히 기계화가 불가능 한데도 농림수산부는 전국적으로 85년 이후 계산신축이 거의 불가능한 제도를 만들었고 이런 규제에서도 우리양계인은 생산기술 향상 노력보다는 음성적인 계사신축으로 숫자늘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농림수산부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규제이전 84년 말 보다 규제이후 88년 현재까지 채란계 숫자가 거의 50%증가되어 오늘의 불황을 자초하였다.

현재와 같은 규제로 수익성이 증가되고 생산기술이 향상된다는 보장은 없다. 양계산업도 규제보다는 자율화로 타산업의 중소기업에 준하는 발전적인 터전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타 대기업의 양계분야 진출을 막아주고, 기존 전업양계인의 자율적 권리를 보장하고, 설비의 기계화를 위해 선진 외국의 설비를 비교 연구하여 설비업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며, 선진국에서 경험한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바로 우리 실정에 맞는 기계생산 설비를 갖출 여건을 조성한다면 농후사료에 의존해야 되는 양계업이라고 국제 경쟁력을 갖지 못한다는 법은 없다고 생각한다.

근면의 한국 양계업 선진국에 뒤질 이유 없어

사료제조기술과 생산설비의 현대화로 생산성을 높인다면 우리의 근면성을 감안할 때, 선진국에 뒤질 이유가 없다고 본다. 미국 양계업자들이라고 우리보다 곡물의 해상운임을 제외한 값싼 사료를 먹이는 것은 아닐 것이며, 곡물파동은 우리만 겪는 현상이 아니고 미국양계업도 같이 겪는 몸살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 양계인은 아직도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서 탈피를 못하고 단결됨 구심점도 없이 우리 양계산업 분야에 전업 채란양계인의 목소리는 거의없고 우리와 이해가 상충되는 이해집단의 목소리가 우리들의 의사처럼 정책으로 결정되어 왔음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이제 우리 채란양계인도 제도에 앞서 생산의 질적 향상 없이는 살아남지 못하고 지금까지의 방관자적 자세와 외부의존적 자세를 버리고 계우화란 사랑방 단체에서 탈피 우리의 협회를 중심으로 힘을 합쳐 단합된 목소리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게 하는 발전적인 자세가 중요하다 하겠다. 양계